

부패 척결을 위한 자산회복 메커니즘 강화에 관한 고위급 원칙

자산회복은 국제 반부패 체제의 핵심 구성 요소이자 유엔반부패협약(UNCAC)의 명시된 목적입니다. 외국에 있는 범죄수익을 포함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는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중요합니다. 범죄 수익 물수는 부패 범죄자가 부패로 인한 보상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의 세탁과 재투자를 방지합니다.

UNCAC, 특히 제 4 장과 제 5 장은 각기 다른 법률 체계가 국내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부패로부터 파생되거나 부패에 사용된 수익의 식별, 동결, 압류, 몰수, 반환 및 처분을 통한 수익 환수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협력 및 지원의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TOC) 제 12 조 및 제 13 조는 당 사국이 자산 회수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는 범죄 수익 또는 도구의 회수를 위한 국제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체계를 갖추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 4 는 선의의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는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테러 자금 조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을 식별, 추적, 동결 또는 압수하고 몰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ATF 권고안 38 은 국가가 외국의 해당 재산 식별, 동결, 압류

및 몰수 요청에 대응하여 신 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총회 반부패 특별 세션에서 채택된 정치적 선언은 다음을 포함하여 국내 및 국 제 자산 회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¹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장합니다: "특히 적절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법 절차를 보호하면서 그러한 절차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자산 회수를 위한 조치 적용에 대한 장벽을 제거한다". 또한 부당한 지체 없이 자산 회수 및 반환과 상호 법률 지원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대응적인 국 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UNCAC 이행의 공백을 포함하여 부패와의 전쟁에서 직면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협약에 정의된 대로 재산을 조사, 추적, 동결, 압류, 몰수, 반환하기 위한 국내 조치를 취하고 자산 회수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부패 범죄를 적절히 처벌하고 부패 및 자금 세탁에 연루된 자를 기소하기 위 한 국내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요청국과 피요청국 간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과 양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성공적인 자산 회수 및 반환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G20 국가들은 수년에 걸쳐 G20 ACWG 가 개발한 여러 문서²에 반영된 자산 회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광범위하게 심의해 왔습니다. G20 국가들은 또한 부패 및 자 산 회수를 위한 고위급 협력 원칙(2016)을 승인함으로써 UNCAC

¹ 2021 년 6 월 2 일부터 4 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반부패 총회 특별 세션에서 채택된 정치선언문 “부패예방 및 퇴치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공동의 약속” 42 항 및 43 항

² 자산회복에 관한 G20 9 대 원칙(2011), 자산회복 9 대 원칙 조사(2013), 자산회복에 관한 국가별 단계별 가이드(2014), G20 국가의 재산공개 시스템 모범사례(2014), 자산추적 국가 프로파일(2012), 자산추적 국가프로파일 업데이트본(2017)

5 장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018 G20 정상 선언³에서는 "국제적 의무와 국내 법체계에 따라 부패 와 기타 경제 범죄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이러한 범죄와 도난 자산의 반환을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후 G20 의장단은 2020 년에 경제범죄, 범죄자 및 도난 자산 회수를 다루는 국제협력에 관한 범위지침서를 개발했으며, 이 범위지침서에서 다룬 이슈를 바탕으로 '자산 회수'에 관 한 내용을 포함한 5 개의 국제협력 싱크피스(2021)를 위촉했습니다: 상호 법률 지원을 위한 실질적 개선⁴ 싱크피스와 책임 보고서 2020 에서는 법적 전통, 법률 및 절차, 자원 및 역량 의 차이, 비공식적 및 공식적 지원 제공의 상당한 지연, 부패 사건에서 유죄 판결에 근거하 지 않은 몰수 요청 집행의 어려움 등이 간소화되고 효과적인 자산 회수를 위한 잠재적 과제 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호 사법 공조(MLA) 절차의 복잡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활동의 증가로 인한 MLA 요청의 양적 증가와 그에 따른 요청 처리 능력의 다양성, MLA 요청과 관련된 품질 또는 절차적 문제, 오픈 소스 정보 및 비공식 네트워크의 저활용이 효율적인 초국적 자산 회복을 방해하는 과제 중 하나라는 점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과 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싱크피스는 국내 사례 관리 개선, 오픈 소스 정보에 대한 의존도 증 가, G20 관할 당국 간 전문가 회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의 효과적인 가압류 메커니즘 등 MLA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혁신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G20 국가들은 G20 국가의 국내 법체계를 존중하면서 자산 환수와 관련된 국제 협력 및 국내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

³ 2018 년 11 월 30 일-12 월 1 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2018 G20 정상선언문 29 항

⁴ 싱크피스는 UNODC, 세계은행, OECD, 금융행동 테스크포스, UNODC/세계은행 도난자산회수 이니셔티브가 2021 년 3 월에 완성하여 이탈리아 의장단 첫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싱크피스는 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이 아니며 국제기구의 초안작성자의 분석만을 담고 있지만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척결을 위한 자 산 환수 메커니즘 강화'에 관한 고위급 원칙을 개발했습니다. G20 회원국들은 이러한 원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국제법 존중, 인권 및 법치주의 존중, 각국의 주권 및 국제적 약속과 국내법 체계 존중을 포함한 강력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 고 있습니다. 이 원칙의 어떤 내용도 G20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위 원칙의 목적상 "부패"는 UNCAC 에 규정된 범죄를 포괄합니다.

원칙 1: 범죄 수익의 환수 및 반환을 반부패 정책 목표로 삼기

G20 국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원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정책 및 운영 수준에서 자산 회복을 강화하고 관련 당국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합니다.
2. 경제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포함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자원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사전 MLA 협력과 수신 MLA 요청의 발신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적절한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자산 회수를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부패 조사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와 관련하여 관할 당국이 해당 국가의 관할권 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해당 자산을 적시에 추적하고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충분한 근거가 있는 요청에 따라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부패와 관련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국제 자산 회수 요청과 관련된 정보와 통계를 수집, 분석, 유지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적절한 국내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내부적으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개선합니다. G20 국가들은 또한 자발적으로 자산 회수 요청과 관련된 통계를 게시하는 것의 유용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성공적인 관할권 간 자산 회수를 촉진하고 도전을 극복하고 자산 회수 체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원칙 2: 범죄 수익의 적시에 효과적인 식별 및 추적을 위한 도구, 메커니즘 및 프로세스가 관련 국내 당국에 제공되고 자산 추적 및 신원 확인을 위한 국제 협력 요청을 하고 실행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

G20 국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원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외국 관할권의 자산 회수 요청에 대해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관련 단일 또는 복수의 국내 당국/기관을 초점/중점 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 페이지 7 의 14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적시 자산 추적 및 범죄 수익의 식별,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국내 조정을 포함한 비공식적/사전 MLA 협력을 촉진합니다.

2. 지정된 중점 기관 또는 관련 당국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 기관과 협력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출처는 물론 관련 국내 등록부 또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관련 출처로부터 자산 추적 및 범죄 수익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사전 MLA 지원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관련성이 있고 해당되는 경우, 반부패 법 집행 기관의 글로벌 운영 네트워크 (GlobE 네트워크),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에그몽 그룹, 자산 회수 기관 간 네트워크(ARIN)와 같은 국제 협력 및 자산 회수 네트워크 또는 그룹에 참여를 강화하고 비공식/사전-MLA 정보 교환을 위한 다른 채널의 사용을 고려합니다.

4. UNCAC 제 46 조(4) 및 56 조와 관련 FATF 권고안⁵에 따라 국내법이나 자체 수사, 기소 또는 사법 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외국 관할권에 선제적이고 시기적절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5. FATF 권고에 따라 법인의 수익적 소유권 등록부 또는 대체 메커니즘을 구축하거나 강화하는 등 국내 메커니즘을 통해 부패 범죄에 대해 조사 중인 법인 또는 법적 계약의 수익적 소유권 상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원칙 3: 범죄 수익의 적시 구속, 동결 또는 압류를 보장하여 관할권 간 이동 및 소멸을 방지

G20 국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원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국내법 및 국내 법률 체계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관련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는 동결 명령을 요청해야 하지만 아직 동결

⁵ FATF 권고안 40 번 및 관련 해석 참고사항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의 이전 또는 소멸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권한, 절차 및 도구를 FIU, 법 집행, 수사, 검찰 또는 사법 당국과 같은 권한 있는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국내법에 따라 관할 당국 또는 관련 기관의 거래 정지, 임시 동결 명령 및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모든 메커니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 집행, 수사, 사법 또는 검찰 당국(해당되는 경우)에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적시에 동결 또는 압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외국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포함).

3. 관할 당국에 권한이 부여되고 내부 정책과 절차는 물론 소산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 대상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갖추도록 합니다.

4 국내법에 따라 적절하게 관할 당국이 직접 채널 또는 국제 협력 및 자산 회수 네트워크 또는 그룹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패 및 관련 범죄의 경우 동결 또는 압류 절차를 선제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칙 4: G20 국가의 국가 자산회복 프레임워크가 효과적인 자산회복을 위해 광범위한 법적 권한, 도구 및 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G20 국가는 국내법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이 원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망, 도주, 부재 등 적절한 경우 유죄 판결이 아닌 몰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민사 또는 행정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산 회수 메커니즘⁶
2. 가치 기반 동결, 압류 및 몰수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⁷ 및 해당되는 경우 외국 가치 기반 동결, 압류 및 몰수 명령의 집행.
3. 선의가 아닌 제 3 자의 명의로 보유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된 범죄 수익의 몰수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
4. 국내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이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재산의 합법적인 출처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5. 해외 자산 동결, 압류 또는 몰수 명령⁸의 적시 집행, 적절하고 UNCAC 제 54 조 및 국내법에 부합하는 경우, 양자, 다자간 또는 상호 합의된 조건 하에서 상호 인정 절차 및 효율적인 국제 협력과 같은 조치에 대한 고려
6. 외국의 비유죄 판결에 근거한 몰수 명령이 최소한의 법적 집행 기준을 충족하는 한, 해당 명령의 효과적인 집행. 이러한 권한에는 요청 국가의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비유죄 판결에 근거한 몰수 명령

⁶ UNCAC 제 54 조 1 항(c), G20 자산회복에 관한 9 대 원칙, FATF 권고안 4 및 38

⁷ UNCAC 제 31 조

⁸ UNCAC 제 51 조 및 55 조

및 관련 임시 조치에 근거한 집행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또한 적절하고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 유죄 판결이 아닌 외국의 몰수 명령에 대한 상호 인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⁹

7. 자산 회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합의 합의가 포함될 수 있는 대체 해결 메커니즘을 고려합니다.

원칙 5: 관할권 간 자산 회수 요청의 적시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의 관할 당국 간 적시에 효과적인 조정과 소통을 보장합니다.

G20 국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원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법공조 절차에 앞서 그리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요청국과 피요청국의 중앙 및 관할 당국 간에 적시에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채널과 절차를 홍보하고 개발합니다.
2. 각 국가의 법률, 규칙 및 절차의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 회복 요청 실행의 사례별 차이를 인식하고 각 국가의 법률 프레임워크,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교환합니다.
3. 이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법적 명칭이 아닌 근본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이중 범죄가 없는 경우, 상호 합의된

⁹ G20 자산회복에 관한 9 가지 핵심원칙(2011)

조건과 국내법에 따라 가장 광범위한 사법공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4. 요청국과 피요청국 간의 이견에 대한 해명 및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양자 또는 다자 조약에 포함된 기타 메커니즘을 촉진합니다.

원칙 6: 성공적인 자산 회복을 위해 오픈 소스 및 기타 관련 정보의 효과적 활용

G20 국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원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자산 추적 및 자산 회수에 관한 국가 가이드"(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G20 국가의 오픈소스 자료 모음집과 다양한 법 집행 네트워크에서 수집한 자료를 포함하여 공개 도메인에 있는 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른 국가가 해당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재산 기록, 자산 등록부, 회사 등록부 또는 수익적 소유권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국내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기타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여 관심 있는 관할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비공개 수익 소유권 또는 익명화된 자금 세탁 관련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수익적 소유권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수익적 소유권에 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적용합니다.

(비공식 번역본)

4.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요청 국가의 부패 관련 절차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 한 오픈 소스 정보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는 MLA 요청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